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제정책방향

2021.12.1

기획재정부 김요균

훈련 개요

1. 훈련국 : 한국, 영국
2. 훈련기관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워릭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
3. 훈련분야 : 정책학 (MPP) / 경제학 (Economics MSc)
4. 훈련기간 : 2020.1.6. ~ 2021.12.31.

훈련기관 소개

1.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소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화번호 : 044-550-1036

웹사이트 주소 : www.kdischool.ac.kr

2. University of Warwick

주소 : TheUniversity of Warwick, Coventry, CV4 7AL, UK

전화번호 : +44 (0)24 7652 3523

웹사이트 주소 : www.warwick.ac.kr

보고서 요약

◇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통상전략 개편, 신산업전략 발표 등으로 적극 대응 중

⇒ 한국판 뉴딜전략을 기반으로 ①통상뉴딜 및 금융뉴딜 추가, ②리쇼어링 정책 추가개편, ③BK21 등 휴먼뉴딜 보완, ④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원 강화, ⑤민관학 거버넌스 시스템 신설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 필요

1 [논의배경]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미중 외 전세계로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산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신통상전략을 발표하고, 산업안보, 디지털무역장벽 신설 등 보호무역주의 전략 강화
- 코로나 19 사태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

2 [주요국 동향]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국산업 보호경향 강화

※ 주요국의 대응전략은 큰 틀에서 유사한 특징 공유

- 자국산업 보호위한 전문조직 신설 및 신통상전략 수립
- 디지털화에 대비,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단일시장 구축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규제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
-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R&D, 인력개발 협력
- 공공·민간분야가 공동으로 출자한 대규모 펀드로 정책 뒷받침
-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심화될 양극화 등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확충

③ [그간 우리 정책과 평가] 한국판 뉴딜 전략 등 체계적 추진

-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수출지원 대책(2018)」, 「제조업 르네상스(201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2020)」, 「한국판 뉴딜 2.0(2021)」 대책 차례로 발표
 - 수출지원 대책을 통해 무역분쟁 초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차세대 산업전략의 기반 마련
 -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통해 통상지형 변형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근본적 전환 노력

④ [향후 대응전략] 통상 및 금융뉴딜 추가, 노동생산성 제고

- (통상뉴딜 추가)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전략에 통상뉴딜 파트를 추가
 - 「산업안보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 →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의 단계별 시스템을 가동
 - 국가 핵심기술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고도화 지속 추진, ‘개방적 디지털 파트너십 모델’ 구축
- (금융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전략에 금융뉴딜 파트를 추가하고, 핀테크와 녹색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혁신자본 대폭 공급
- (휴먼뉴딜 보완) 4단계 BK21사업 재편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 육성, 직장인 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등
- (R&D 개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개편, 국가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신속 추진, 기술다각화·지역R&D 역량 확충
-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2.0」을 구성하여 Bottom-up 방식 기술개발 및 인재개발 전과정 협력
- (리쇼어링 강화) 유턴법을 개정하여 대상기업의 범위 추가 확대, 기업규모 비례가 아닌 업종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마련 등

목차

I. 서론.....	7
II. 문헌검토.....	13
III. 그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20
1. 주요국들의 대응.....	20
(1) 미국.....	21
(2) 중국.....	28
(3) 일본.....	32
(4) EU.....	36
(5) 영국.....	40
2. 해외 주요국 정책 사례의 시사점.....	44
3. 그간 우리나라의 대응.....	50
IV. 그간 우리정책에 대한 평가.....	70
V. 향후 정책대응.....	77
1. 통상뉴딜 추가.....	78
2. 산업정책 보완.....	81
3. 휴먼뉴딜 보완.....	86
4. 금융뉴딜 추가.....	87
VI. 결론.....	93
References.....	97
Appendix.....	101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은 각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촉발시켰다. 한국은행(2018)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수입관세율 하락세가 크게 둔화됐고, 2012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제재 건수가 크게 늘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북어졌다. 2018년 미국은 안보 위협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15-25%의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간에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무역분쟁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강국의 무역분쟁은 전세계 각 국에 경제적, 정치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반에 확산된 국제무역질서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변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1995년 출범한 WTO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거래 분쟁 해결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끈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계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KDI(2020)에 따르면 이러한 WTO 체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에 의해 최근 들어 그 역할과 기능이 도전

받기 시작했다. 그 예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무단 도용과 관세 부과에 대해 WTO 시스템을 통한 해결 시도 대신 직접 대응했고, 중국도 이에 대해 관세 부과로 직접 대응했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WTO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대립하면서, 그 영향은 다른 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은 2019년 말부터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각국이 WTO 규범에 위반하여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할 유인이 생겼다고 평가하였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통상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 축소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성행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간접적으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는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해가 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에서 겪은 바와 같이 주요 소재부품 공급처가 끊기게 되면 중간재나 완성품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21년 10월에는 중국과 호주의 통상분쟁에 따른 석탄교역 중단으로 인해 촉발된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가 우리나라

유통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하면서 요소수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 등의 운행이 일부 중단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은 통상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 등의 반도체 기업에 기밀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저성장과 산업경쟁력 약화, 불평등의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중국 경제는 급부상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 등에서는 경쟁력이 낮아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양극화 심화 문제가 이슈화됐다. 손열(2016)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화가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한편, 소재부품 등을 무기화하여 산업보안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반발세력은 비슷한 이유로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주요 품목 및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과 방위,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무역연구원(2020)은 최근 자국 경제의 우선 순위를 강조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이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EU, 터키, 캐나다 등은 2018년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봉쇄되면서 주요 품목의 자국 공급망 확보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KOTRA(2021)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생산구조가 더욱 빠르게 축소되고, 수요지역에 공급망을 집중시키는 니어쇼어(Near Shor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강화도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소국경조정이 하나의 예이다.

기후변화는 무역규제를 높이고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2021)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호무역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 무역을 둔화시키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흐름을 봤을때 세계 무역 성장률은 1990년대 평균 2.1%에서 2000년대 1.6%, 2010년대 1.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양상과 관련해서 IMF(2020)는 미·중 무역분쟁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2019)은 2019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당초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여건 변화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도 점차 낮아졌다.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과 생산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뿐 아니라 EU,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통상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들의 대응은 오랜기간 국제질서로

자리잡아온 WTO 체제에 기반한 개방주의를 벗어나 보호무역주의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 대응 뿐 아니라 근본적 시스템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마련할 시기이다. 한국은행(2018)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세계 무역환경의 배경에는 경제구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무역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교역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2019)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무역 대상국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 마련, 산업구조 고도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 마련 등 국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에는 제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정책 과제 외에도, 세계 보호무역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을 연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무역 및 통상 정책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현 통상환경과 향후 예상, 관련 정책제안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간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에 보완할 점에 대해 제안한다.

II. 문헌검토

OECD는(2017)는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생산 부문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재편돼 향후 세계 무역질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2018)도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됐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글로벌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제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2008년(14.1%)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3.2%를 기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2020)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지속, 제조업 탈중국화, 국제기업 환원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장기적으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WTO가 추구하는 개방의 원칙과 중립적인 세계 무역질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2019)도 보호무역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각국은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미국 국가경제조사국(NBER, 2019)은 미·중 무역분쟁은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손해지만 미국

제조업에는 이익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순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미국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세계무역질서의 변화가 세계무역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2018)은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 국가 간 글로벌 가치사슬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세계 분업 확산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세계 무역, 생산성,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2019년)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무역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지역별로 무역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2019년)는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세계무역 증가율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과 기술의 유출을 방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높임으로써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국내 연구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국은행(2018)은 한국 경제는 무역구조상 상대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악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제무역연구원(2020)은 2019년 1~10월 대중국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의 49.9%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KDI(2020년)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인해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서 2.0%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성장 효과 외에도 한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제무역연구원(2020)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강화와 중국 시장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로 우리경제의 산업경쟁력 근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외연(2021)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분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공급망 및 투자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의 여파는 코로나 19 사태의 효과와

결합하여 우리경제에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2020)은 코로나 19 사태가 ① 고용 감소, ② 교역비용 증가, ③ 대면 서비스 관련 수요 감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코로나 19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수출품 생산 감소, 항공편 축소 등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 전반적 소득 감소에 따른 무역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2021)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인 교역 둔화가 우리나라의 산업 편중도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KOTRA(2021)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욱 축소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지역에 근접한 공급망 구축현상(Near-Shore 현상)이 확산되고, 공급체인이 보다 다양화되며,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별 경쟁력과 교역대상국의 무역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은행(2021)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IMF(2019)는 각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의 단기적 성장을 하락에 대응하여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2018)도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KDI(2020)는 세계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무역지형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다. 아세안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경제이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면 한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한편, 한일 무역분쟁과 같은 산업안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수출지원책의 실효성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연구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2019)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분석에 기초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것은 R&D와 제조기지를 한국에 유치하고 ‘산업 공유자산’을 형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공유자산은 새로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장기 인력을 구축함으로써 건설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은 최근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수출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였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을 위해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 가치사슬 부상에 대비하여 니어쇼어링이나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수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자협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주요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2020)은 우선,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역량이 서비스 수출 촉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의 유턴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국가 R&D 전략을 혁신하여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넷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첨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혁신동력을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중국에 대한 수출 전략을 검토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음 파트부터는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후, 지금까지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절히 결합하고, 해외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한편, 그간 정부의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그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1. 주요국들의 대응

이 파트에서는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¹⁾

1) 동 파트의 주요국 정책 관련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에서 발간한

(1) 미국

1) 그간의 통상·산업정책

- 2017 년경부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당한 경제활동에 따른 대규모 무역적자의 비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중국의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도용, 불법 보조금 등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안보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교역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합의를 이끌어내어 목적을 관철함과 동시에 전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 미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을 개정하여 핵심기술, 주요 인프라, 주요 기반시설 인근의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부동산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 미국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과 함께 자국의 제조업 가치사슬을 공고히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다. 오바마 정권에서부터 제조업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였고,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전략에 자국중심주의적 요소를 더하여 ‘Manufacturing U.S.A’ 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였다.
- Manufacturing U.S.A 는 미국의 각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협의회, 각 기업등이 팀을 구성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해 논의함과 동시에 필요한 신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11 개 정부부처에서 58 개 연방 제조업 지원책을 운영중이다. 정부지원은 세금, 보조금, 연구, 인력, 금융 지원 등 프로그램별로 특화되어 지원된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와 함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도 추진하였다. ‘two for one’ 원칙,

‘zero net regulatory cost’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환경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였다.

3) 혁신경쟁법(USICA) 입법 추진중

-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통상전략의 일환으로서 혁신경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21.6 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신기술,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2,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무역, 안보, 산업경쟁력 정책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산업전략이지만, 한 파트를 모두 대중국 제재의 내용으로 마련하는 등 통상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무역협회(2021)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과학기술 진흥 법안 - 산업안보분야)

- (반도체) 핵심산업의 생산에 필수요소인 반도체 생산시설을 국내에 최대한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한다.

- 미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 공정에 걸친 시설 확장, 기술 개발, 생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와 동시에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상무부 내 민관 합동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부문 및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반도체 제작 기술개발, 연구조사,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국적 반도체 펀드를 설립, 협력대상 국가들과 공동으로 수출통제 및 공급망 구축 협력을 촉진한다.
- (통신)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무선공급망혁신펀드를 조성하여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개편한다.
 - 5G ‘장비’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고, 화웨이 대체품이 미국내에서 생산되도록 공급망을 재구성한다.
 - 정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전기통신정보청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투자를 촉진한다.

② (연구개발법안 - 기술혁신분야)

- 5년간 1,200억달러를 공공분야에 배정하여 연방정부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주도하고 민간과 협력을 추진한다.
- 국립과학재단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배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테스트베드 건립,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 해외국으로부터 미국의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 내 ‘연구안보오피스’를 신설하고 일선 대학들이 수행한 연구결과 유출 방지를 지원한다.
- 제조업 민관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배로 증액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③ (중국견제법안 - 중국대응분야)

- (전략경쟁법안) 중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리더십 강화, 동맹 협력 확대, 디지털 협력 강화 등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국제정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응한다.
- (경제통상) 중국이 지식재산권, 기술, 보조금 등에 대해 일으키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 (미국가치수호) 인권, 공정, 자유, 투명성 등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한다.
- (디지털) USTR은 EU, 일본, 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디지털 상품 특약을 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 (중국도전대응법) 중국의 미국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활동을 한다.
 - 중국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중국기업의 미국시장 교란 및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응한다.
 - 중국정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유령회사를 적발하여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④ (무역법 - 통상분야) 미국 가치에 반하는 제품을 검열하는 한편, 통상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 강제노동, 지식재산권 탈취에 기반한 제품을 검열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검토한다.
 -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검열을 예방하고, 우방국과 디지털 무역장벽을 제거한다.
 - 통상분쟁 등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 무역법 301 조에 대중 추가관세 면제절차를 재개하여 추가관세로 인해 피해입은 미국민을 보호한다.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 수입품 대상 관세 면제제도)를 재개하고, 허가주기를 연장한다.
 -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를 재개하여 미국 기업들이 완성품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재개한다.
 - Buy America 규정을 강화하여 미국의 공공사업에서 미국산 구매를 강화하고, 국내산 의료용품의 제조역량을 강화한다.

- GPA 협정이나 기 체결한 FTA 협상과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공공인프라 건설, 유지, 교체에 사용되는 철강, 건축자재, 제조품을 미국산일 것을 규정한다.
- Buy America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세부법안	주요내용
반도체·통신법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중국산 통신장비 의존 방지
영원한 프론티어법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국 신설, 연구안보 강화, STEM 인재양성 촉진
전략경쟁법	중국위협에 대비한 국제협력, 미국가치 수호, 수출통제 강화 등
미국미래보존법	중국산에 대응할 BUY American 적용 강화,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
중국도전대응법	중국의 인권탄압 등 행위에 대응할 기존 및 신규 제재 적극 활용
무역법	일반특혜관세(GSP) 미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MTB) 재개, 301조 추가관세 면제 재개 등
기타	미 고등교육기관의 공자학원 연계성 조사, 합병수수료 체계 현실화

(2) 중국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십 액션플랜 발표

- 민관공동 지원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보안 강화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융합을 촉진한다.
- 산업, 정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존 인프라 디지털화, 정부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 (뉴 SOC) 5G, 클라우드, AI 등 정보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에너지 등 전통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융합인프라, 과학기술 및 교육 등 혁신을 위한 혁신인프라 등 3대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 (신소비·신유통) 디지털과 결합하여 소비행태와 유통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발전을 뒷받침한다.

2)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 (녹색소비) 비대면, 비접촉 경제활동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용, O2O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을 통해 녹색소비를 달성한다.

- (녹색생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그린테크 등 생산품 뿐 아니라 생산방식도 녹색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
- (녹색금융) 의료폐기물 처리 전문 대출, 녹색채권 발행, 녹색금융 시범지구 운용 등 녹색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3) 첨단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선도

- 첨단제조를 표방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후속으로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준비한다.
 - 중국의 차세대 산업 국제 선도를 위해 중국의 기술이 국제표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을 추진한다.
- 민관협력으로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 자립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4) 무역통상조치

- ① (기술자립강화) 미국, 유럽 등의 통상조치에 대응하여 AI, 5G, 빅데이터 등 차세대

범용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 RCEP 의 조기 타결 및 한중일 FTA 추진을 통해 역내 중심적 위치를 구축하여 대외통상 지도 변행을 도모한다.
- 외상투자법을 올해 최초로 시행하여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외국자본 비차별 대우 등이 국제법에 준수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② 수출상품의 내수화 및 로컬브랜드 육성

- 내수전환용 수출제품 전문구역 설치, 대형 상업기업의 수출제품 직접 소싱 확대 등을 통해 수출제품의 내수판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 대외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빅데이터와 산업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내수 상품 개발을 협의한다.
- 중국 브랜드 고급화,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로 ‘브랜드 진흥 프로젝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 내수시장 발전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소득세 부과, 제품품질 검사 강화, 소비재 리콜 관리 등에 있어서 법적 내실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확대한다.

(3) 일본

-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하여 일본도 민관 협력체 구성 등을 통해 전략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한다.²⁾

1)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추진 정책

① 무역 및 통상정책

- 해외투자 심사엄격화 조치 등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전력 및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추득시 사전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를 개편한다.

2) 산업연구원. 사공목. 2021.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대응전략. 산업경제분석. 내용을 포괄적으로 참고

- 국제협력은행의 용자 및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엔차관 확충 등을 통해 일본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 재구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태국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십 구상을 추진하는 등 태국에 ODA 지원과 함께 생산거점 이동 등을 통한 가치사슬 협력을 강화한다.
- 일본무역진흥기구에 의한 해외진출기업 상담체제 확충,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② 공급망 재구축

- 리쇼어링 지원 등을 포함한 2.5 조원 규모의 공급망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한 제품이나 부품산업의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회귀할 경우 그 비용을 대중소 기업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이 한 국가에만 주로 수출되거나 한국가에서만 주로 수입되는 경우,

그 생산설비를 아세안 등 제 3국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아세안 디지털화

-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생산거점화 하여 통상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일본의 주요품목별 특성과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변화

	자동차	IT제품	의료물자
공장	부품수가 많으나 전기자동차는 모듈화가 용이	조립까지 다수의 공정이 필요하나 모듈화가 용이	부품이나 제조공정 수가 비교적 적음
물류	해운 중심	항공 중심	항공, 해운, 육상
과거 공급망	다양한 공급망, 노동집약적 제품은 생산거점 집중화 경향	조립은 노동집약적,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소재는 고도 기술자 밀집 장소에 공급망이 집중	범용품은 노동비용이 저렴한 곳에 공급망이 집중되는 경향
코로나 공급망 영향	일부 부품의 공급 지체가 전체 공정의 정체를 야기, 수요부족으로 가동 중단 사태 등 초래	일시적 부품조달과 조립 가공 지연이 발생했으나, 전반 산업에 큰 차질 없음	의료물자 수요 급증으로 인해 각국이 수출제한 정책을 채택하여 세계적 공급 부족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재구성

2) 산업정책

- 2017년 이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전략인 Society 5.0 전략에 더해 코로나 이후 4대분야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 ① (디지털 뉴딜) 행정수속을 온라인화 하는 등 차세대 행정서비스 구축, 5G 및 차기 통신전략 가속화, 서플라이체인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 ② (지방도시 혁신) 스마트시티 실증 등을 통해 전국 각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다핵연대형 국가화 추진, 지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③ (혁신경제역량 양성) 혁신은 인재양성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대비 교육혁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신설한다.
- ④ (포용적 사회) 의료시스템에 디지털을 도입하여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에 대비한다.

(4) EU

1) 유럽 그린딜

- 2050년까지 EU 내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기후법 제정,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산업 등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 (기후법) 2050년까지 기후중립에 대해 EU 회원국 대상으로 법적구속력을 부여한다.
 - (산업) 재활용, 재생에너지 중심 순환경제 실행계획, 유럽 배터리연합 지원 강화, 탄소제로 철강제조를 지원한다.
 - (수송) 저공해 차량 충전소, 복합수송, 스마트 수송관리 등 도입으로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90% 감축한다.
 -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EU 예산 0.5 조유로, 회원국 출자, 민간투자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1 조유로를 조성하여 그린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 (공정전환기금) 그린딜 정책 추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에 전환기금으로 10년간 1,000억 유로를 조성한다.

2) 유럽 디지털 전략

- 2020.2.19.일 EU의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여 역내 디지털 시장 통합과 데이터 통제권 강화를 추진한다.
- (유럽데이터 전략) EU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 데이터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정립, 통신장비 산업 투자 확대, EU 클라우드 구축 등 추진한다.
- (인공지능백서) 향후 10년간 2000억유로를 투자하여 EU에서 AI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이 공정한 조건에서 혁신 및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유럽 신산업 전략

-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전략을 마련한다.

- ① (디지털 단일시장) 지속가능한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마련, EU 경쟁법 개정, 지적권 보호강화,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 ② (글로벌 공정경쟁) 제 3국의 정부보조금 관련 백서 마련, WTO 산업보조금 규율 강화, 국제공공조달 규정 조속 채택, 관세동맹 이행계획 등을 통해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한다.
- ③ (기후중립 전환) 친환경 철강 및 화학 전략, 범유럽에너지망 규정 개정, 스마트 운송전략 마련,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 ④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배터리, 수소, 저탄소산업, 클라우드 등 영역에서 민관 산업연합을 구축한다.

3) 산업주권 확대

- COVID-19 을 계기로 의약품 및 핵심기술의 높은 대외의존을 낮추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50 년까지 두 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원자재 수요의 소싱 다변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EU 기업에 대한 역외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틀을 2020 년 10 월까지 확립한다.
- 공정한 무역을 위해 반덤핑, 보조금, 규제(노동 및 환경 등) 영역에서 상대국의 공정경쟁 이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 ① EU 에 통상감찰관(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직제를 도입하여 무역협정 체결국의 규범 이행을 감시한다.
 - ② 신규 무역협정 체결시 환경 및 노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영국

1) 영국 정부(2017)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5 가지 기반으로 혁신 아이디어, 인재양성, 인프라, 산업환경, 공간적 기반을 설정하는 산업전략을 발표하였다.³⁾

① (아이디어) R&D 투자비중을 2027년까지 GDP 대비 2.4%로 향상시킨다.

- R&D tax credit 을 12%까지 인상하고, 산업전략 도전펀드에 약 1조원 수준 투자하여 혁신을 유도한다.

② (인재) 영국의 앞선 고등교육 경쟁력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교육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한다.

- 수학과 디지털, 기술 교육에 현재 대비 추가로 6천억을 투자하고,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보다 강화한다.

3) 영국 재무부의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2017)를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 새로운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매년 약 1,000 억원 수준의 디지털·건설 교육에 투자한다.

③ (인프라)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45 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통과 건축,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 전기차 인프라와 플러그인 충전소 확대를 위해 1 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5G 3 천억, 지방지원 3 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1.5 조원 규모 공공분야 투자를 추진한다.

④ (사업환경) 각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 그 시작으로 생활과학, 건설,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에 대해 민관협력체를 신설한다.

- 영국산업은행이 주도하는 4 조원 규모의 공공펀드 설립을 포함하여 30 조원 규모의 혁신 투자를 유도한다.

- 낮은 생산성과 실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⑤ 지역산업전략을 마련하여 각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조원 규모의 신도시전환펀드를 신설하여 도시간 교통에 투자한다.

- 600억원 규모의 교사발전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신설하여 교사의 고품질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2) 영국 정부(2019)는 ‘2050 탄소제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실천전략으로 ‘녹색금융전략 (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였다.⁴⁾

- (금융녹색화) 기후변화 인식의 확산, 금융 공공분야 운영 규범에 책임의 명확화, 기후변화 금융 관련 정보공개 촉진을 통해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의 정책운용을 추진한다.

4) 영국 재무부의 「UK Government Green Financing Framework」(2021)를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 (녹색자금조달) 녹색금융이 수익성을 확보하여 투자회수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공공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 Heat Investment Project 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3 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탄소효율적 사업에 2021 년까지 총 10 억 파운드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

- (기회포착)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통계 생산,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3)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각 지역별 FTA 를 추진하고 있어 아직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전략은 디지털화, 녹색산업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주요국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특히 영국은 최근 녹색금융허브화 전략을 통해 핀테크 및 각 산업 민관협력체와 연계하여 금융산업적 새로운 실험을 추진 중이다.

2. 해외 주요국 정책 사례의 시사점

- (1) 주요국의 미래대응 산업전략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크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산업안보 강화, 디지털화 가속화, 녹색산업 육성, 리쇼어링 정책 강화, 민관 산업협력 거버넌스 구축, 금융지원 강화, 양극화 등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병행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1)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중 무역분쟁은 바이든 정부에서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관세 마찰은 줄어들 수 있으나 혁신경쟁법 등 실제 통상에서 마찰이 있을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보다 강화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분쟁과는 별도로 각 국은 보다 명시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글로벌 개방주의라는 명분상 시행하지 못했을 조치들을 과감히 논의하고 있다. EU도 EU 경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사한 정책기조를 표출하고 있다.

2) 산업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는 국내 산업 증진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안보의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 제품과 장비 등의 공급망이 국내에 부족할 경우 안보의 문제에도 직결됨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3) 디지털화 가속화

- 각 국은 제 4 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디지털화를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 전략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무역에서는 대외의존도를 줄일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표방하며 EU 내 디지털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적극적 지원 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장이 글로벌 주요 지역 단위로
뉘일 가능성이 높다.

4) 그린산업 육성

- 그간 유럽이 선도해온 환경 어젠다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철강·화학·수송 산업의 친환경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 탄소국경조정* 등의 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시, 그린뉴딜은 일종의 보호무역장치로서도 기능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며 산업적, 기술적 경쟁력을 먼저 쌓아놓은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와 통상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규제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

5) 리쇼어링 정책 강화

- 각국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산라인을 국내로 복귀 시킴으로써 소재, 부품, 제품 공급망을 최대한 안정화 하려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 각 기업들이 아직 중국 등 신흥국의 값싼 비용 등 때문에 생산라인의 리쇼어링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을 국내로 생산라인을 복귀시키 위해 각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6) 민관 산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요국은 그간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을 강조한 기조에서 벗어나 각 산업별로 정부와 민간, 학계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 민관협력을 통해 해당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리스트업하고, 이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경우 기업에 공유하여

제품개발을 지원, 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의 경우 학계와 협업하여 기술을 개발한다.

- 중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해 민관학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7) 금융지원 강화

- 각국은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영국 등은 정부 재정과 금융공공 기관이 공동출자한 후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신산업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주요국은 전반적으로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펀드 및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8) 사회정책

- 주요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피해입는 계층을 지원하고,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양상은 과거 민간 자유를 우선시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율과 개방하 선택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 운영 원리에서 벗어나, 산업의 운영에 공공분야가 본격적인 협력의 주체로 대두하는 공공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로의 변화는 그 변화의 특성과 영향,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쉽게 그 흐름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역별로 분절화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역별 통상협정을 포함한 통상 무력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 녹색산업 분야에서 서방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가 향후 변화하는 산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EU 등은 개별적 표준 정립, 자국 산업 내 가치사슬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주요국은 민관학이 협력해서 기술과 특허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발전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3. 그간 우리나라의 대응

- (1) 우리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2018년경부터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리스크를 인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수출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판 뉴딜 정책,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 등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대규모 규제혁신·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 동파트에서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수출활력 제고 대책(2019.3)

※ 수출활력 제고 대책 기본방향(기획재정부, 2018)



- 정부는 2019년 초반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미중 무역분쟁, 미 무역확장법 232 조 조사, 신무역지역 등장 등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단기 수출활력 제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수출 계약 → 제작 → 선적 → 결제 모든 과정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수출마케팅 확대) 수출마케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 전시회 등 개최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 정부내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수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②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력 수출품목별로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신 수출성장동력 육성) 바이오헬스, 콘텐츠, 농식품 등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산업 중심으로 수출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펀드 신설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 (신흥시장 진출 강화)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고도화하고, 각 지역별로 수출지원 센터 설치 확대를 검토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대한다.

2)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6.19.)

- 정부는 제 4 차산업혁명 및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한다.

① (스마트화 · 친환경화 · 융복합화)

-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확산시키고, AI 기반 산업지능화 추진. AI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AI 팩토리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친환경차, 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산업단지를 청정화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융합신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 산업분야별로 민간 주도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정부는 제조-서비스 기업간 매칭, 공동개발 지원 등 이업종간 협력을 강화한다.

②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개선)

-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국제 표준화 전략 수립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 주력산업이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 소재부품특별법을 개정하여 100대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지원을 추진한다.
- 기업구조혁신펀드를 4조원 추가로 확대하여 전통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한다.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③ (산업생태계 개편)

-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공학 교육을 혁신하고,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교육 시스템을 개편한다.

-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온라인공개수업 확대 등

-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④ (투자과 혁신 지원)

-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적대화 입찰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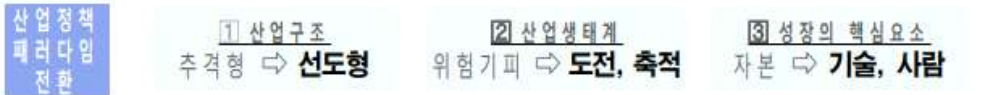
※ 제조업 르네상스 지원대책 비전 및 방향(산업통상자원부, 2019)

비전 및 목표

세계 4대 제조 강국

▪ 제조업 부가가치율	('17) 25%	⇒ ('30) 30%
▪ 新산업·新품목 비중	('18) 16%	⇒ ('30) 30%
▪ 세계일류기업	('18) 573개社	⇒ ('30) 1,200개社
▪ 수출 순위	('18) 6위	⇒ ('30) 4위

추진 전략



- 1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단 + AI 기반 업종 특화 산업지능화
 - **친환경화** :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 → 친환경시장 선두국가 도약
 - **융복합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 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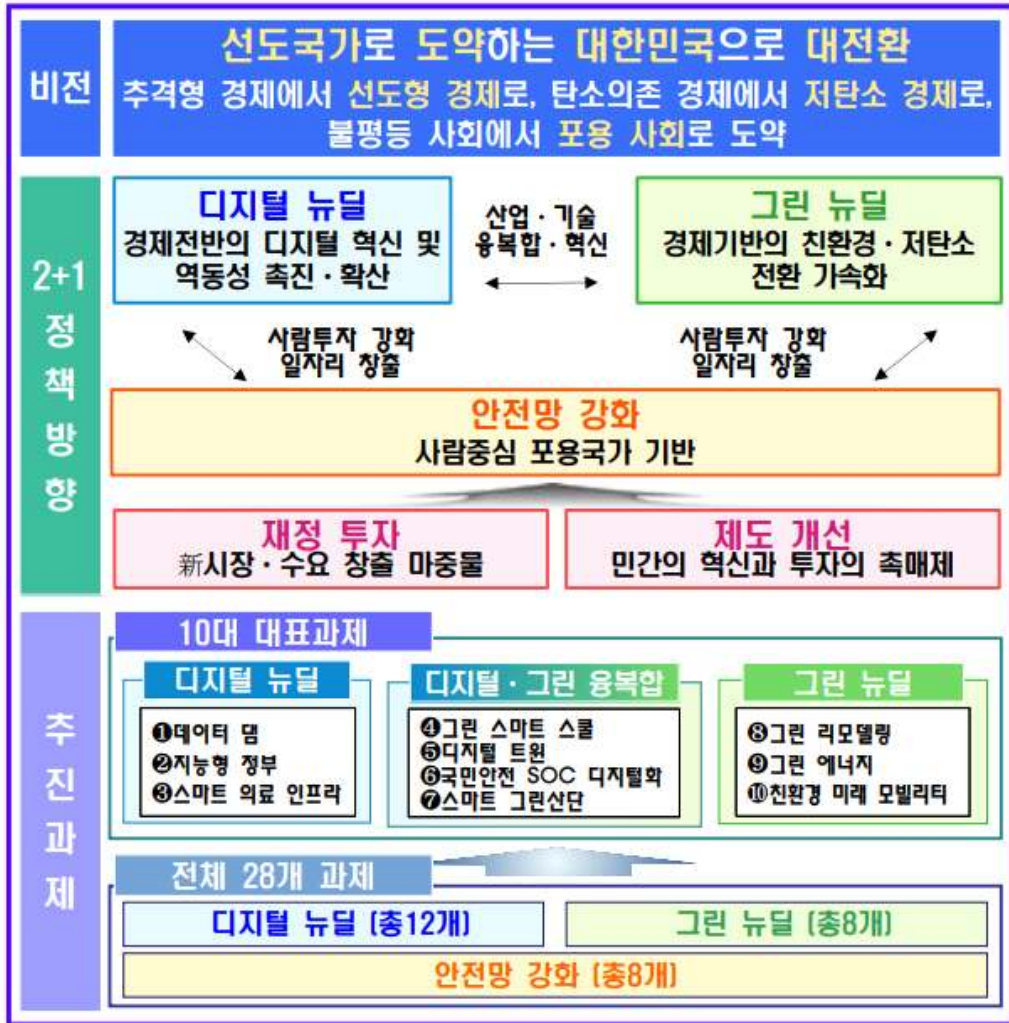
 -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 제조업의 허리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
 -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 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 **기술** :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토록 R&D 체계 혁신
 - **금융** : 혁신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 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창출, 대규모 실증 확대**
 -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기본방향>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①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②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③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 (취지)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경제·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과거 미국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하여 “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의 단계별 구조개혁 전략을 발표한 것을 본보기 삼아 한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을 마련하였다.
- (큰 방향) 코로나 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면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그린 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 확대, 원격근무 확대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을 야기하므로 이에 따른 양극화 완화 정책을

병행하였다.

① (디지털 뉴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 (D.N.A 생태계 강화) 데이터 수집 및 개방을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데이터 전주기에 따른 생태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보안 유망기술 및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무선망 설치를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대폭 공급한다. 대학 및 직업 훈련기관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중심으로 노후서버에 대한 교체를 지원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직업훈련의 효과를 개선한다.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스마트의료 시스템을 확산시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디지털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SOC 디지털화) ‘25년까지 총 16 조원을 투자하여 교통, 수자원, 재난 등에 대한 관리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플랫폼을 각각 구축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물류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②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025년까지 총 30 조원을 투자하여 학교 및 공공시설을 모두 신재생에너지화 하고, 스마트그린도시, 도시숲 확산, 그린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25년까지 총 36조원을 투자하여 전력망을 스마트화 하고 풍력, 태양광 설치를 확대한다. 공공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신속 추진하고, 추진 인프라 및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한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한편,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를 신설한다.

- ③ (안전망 강화) 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분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고용·사회 안전망)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으로는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 (사람투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녹색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연구단 등을 확대한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 만명을 목표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시키고,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지원하는 등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강화

4)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2020.7.21.)

-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의 글로벌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신보호무역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통상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 ① (통상지원 강화) 필수 기업인에 입국특례를 부여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인이 입출국과 관련된 고충을 일괄 지원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② (통상협정 확대) 정부는 FTA 뿐 아니라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하는 신 통상협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산업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장 접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RCEP, 신북방·신남방 FTA 확대도 추진한다.
- ③ (통상 지원시스템 정비)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협력체계인 통상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상협력종합 계획 수립 및 관련 재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기업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상 대응 포털을 신설하여 통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법률 및 회계 컨설팅 확대도 추진한다.

- ③ (디지털 통상 지원) 정부는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 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강화한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견국들과 협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 대상국의 수요과 발전 수준에 맞추어 디지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디지털 ODA 협력도 강화한다.

- ④ (의료 통상 지원) 정부는 의료·위생용품 등 K-방역 품목, 청정가전 등 품목에 대한 통상 활성화 협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에 대한 차별화된 통상 협력 지원을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를 구축한다.

- ⑤ (공급망고도화) 디지털 등 미래신산업의 경우 주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인 미국, 중국, EU 등과 함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고도화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국과 통상제도 협의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유치, 표준 협력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5)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021.7.14.)

<기본방향>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1년간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안전망 강화’ 파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동 파트를 ‘휴먼 뉴딜’로 확대하는 가운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판 뉴딜의 실천전략 차원에서 각 지역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전국토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다.

① 휴먼 뉴딜 추가

-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고용,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50조원 수준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디지털 및 그린산업에 대한 인재양성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한다.
-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② 지역균형 뉴딜 추가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전국 각 지역으로 적극 확산한다.
- 지역별 주력사업을 디지털 및 그린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역 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연관 프로젝트를 자체 개발 및 주도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행정 및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③ 디지털 및 그린뉴딜 보완

-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공공분야에 관련 기술을 적용한다.
- 디지털 뉴딜이 국민생활에 빠르게 확산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감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한다.
- 산업계의 탄소감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자원순환시스템을 마련한다.
-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더욱 확대한다.

④ 뉴딜 추진 기반 강화

-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적용 대상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산업을 추가하여 산업 구조개편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 산업구조 변화 시 노동이 공정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노동 분야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정책형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펀드조성 지원을 위해 세제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IV. 그간 우리정책에 대한 평가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주요국과 비교시 그 시기 및 내용 측면에서 큰 부족함 없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전략은 주요 국제기구 및 언론 등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2021년 2월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책자를 발간하며, 한국의 뉴딜 정책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을 친환경적, 포용적으로 뒷받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디지털 산업 육성, 그린 산업 확산에 대한 대응, 사람에 대한 투자, 이에따른 고용 및 분배, 지역균형 차원에서의 뒷받침 정책 등이 조화롭게 강조되며 정책수요를 채워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산업에 대한 대응의 경우 다른 주요국 대비 보다 포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의 전환에 대해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먼 뉴딜의 경우도 OECD 평균과 비교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인력개발과 취약 계층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제기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⁵⁾

- 이 파트에서는 주요국의 산업전략 전반과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① 우선 최근 우리 산업의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에 대비할

5) “The current vision for an Innovative and Inclusive State differs from past administrations in that it overcomes the legacy of growth-biased policies and strongly promotes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hile also stressing fair economic participation at all levels of the society. By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f policies, the vision strives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and competition in the economy and pursues active redistribution measures, especially targeted to vulnerable groups. Accordingly, Korea has exhibited notable progress in enhancing the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판 뉴딜 종합전략에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이 실려 있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분쟁 및 산업 안보에 대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혁신경쟁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통상전략을 수립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지식재산권, 통상분쟁 각 분야와 관련된 정부조직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산업주권 확대를 키워드로 주요 공급망 안정화 및 소싱 다변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통상감찰관 직제를 EU 본부에 도입하는 등 통상정책 분야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도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통상 및 공급망 관련 뉴딜 파트를 추가할 경우 보다 포괄적인 뉴딜 전략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② 한국판 뉴딜의 추진기반으로서 ‘금융뉴딜’을 추가할 경우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디지털과 녹색 신산업에 민간의 자본이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과 투자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모험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담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금융으로서는 전부 감당하기 어려우며 핀테크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금융이 발전하고, 필요시 공공분야가 리스크를 일부 완화해주는 지원등이 병행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가 핀테크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AI 투자 및 대출 심사, 규제테크 등 핀테크는 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대출 심사를 고도화하고, 모험 자본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핀테크와 금융 발전의 요소가 필요하다. 영국과 EU 등은 자국을 핀테크 중심지이자 녹색금융 중심지로 개편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편과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이 대대적인 녹색금융전략을 발표하고, EU가 유럽그린딜 투자계획을 세운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다.

- ③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전략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리쇼어링 정책이다. 한국은 2019 년과 2020 년에 걸쳐 유턴법을 개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기 때문에 당장은 정책적 수요 과약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고려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들어 산업연구원(2021.2)에서는 추가적인 리쇼어링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④ 휴먼뉴딜 중 인재양성 파트의 경우 현재 디지털, 그린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신산업전략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기초과학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 기반 제 4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고등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인적 자본 형성과 기술발전, 생산성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QS 대학평가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 30 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1개도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전통의 대학 강국 외에도 중국이나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경제대국이 모두 30위내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매우 부족한 성적이다.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세계 36위, 아시아 14위에 불과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통상 지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먼뉴딜을 통해 양극화에 대한 대비를 함과 동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적자본과 학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재교육의 경우도 최근 빠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산업별, 계층별, 연령별로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이 마련하고 매년 1,000 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는 영국의 케이스를 참고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⑤ 각 산업별 지원의 경우, 특정산업별로 특정 목표를 세우는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기술진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기술개발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가 보다 긴밀하게 돌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은 Manufacturing U.S.A 전략을 통해 세부산업별 프로젝트별로 민관학 팀이 구성되어 기술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도 Sector-deal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민관학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우리의 각 산업도 이와 같이 유기적이고 Bottom-up 방식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체감 가능한 정부지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⑥ 마지막으로 산업, 통상 정책을 좀더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와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은 산업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재부에서 각각 발표하여 체계적인 정책 관리가 부족할 수 있다. 현재는 뉴딜 종합계획이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2019년 발표 이후 지속 관리온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성과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관리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부처간, 그리고 부처내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산업안보와 통상, 신산업 육성, 휴먼뉴딜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빠르게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통상 구조에 맞추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각 담당부처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정책을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V. 향후 정책대응

- 이 파트에서는 그간 검토한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통상뉴딜 추가

1) (총론) 통상전략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판 뉴딜 전략에 통상뉴딜 파트를 추가하고, 산업부의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반영하여 추진하되 보다 큰 틀의 경제·산업 전략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공급망 대응전략) 글로벌 가치사슬 대응전략은 우선 「산업안보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 →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의 단계별 정책추진 시스템을 가동한다.

① (산업안보) 산업부의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에서 언급된 형식의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추가 논의를 통해 설치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상시적인 관찰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시급한 조직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추후 논의를 거쳐 상시적인 조직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신보호무역대응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등과의 역할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안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기술의 확대 및 감시 시스템 고도화,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 대폭 확대, 기업의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 기술보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② (공급망 안정화) 민간의 비축 요구 물품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주요 해외 공급품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시 비축 물품 보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체수입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수입선 다변화 유인을 제고한다. 핵심 품목에 대해 국내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내 신규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내 제품 고도화 및 다양화 방안을 논의한다.

③ (공급망 고도화) FTA 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누적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 철폐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경제부처 협의 등을 통해 K-방역 품목, 청정가전 등 유망 산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한다.

3) (디지털 경제권 형성) 정부는 미국, EU 등이 자국중심의 디지털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위치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디지털 파트너십도 보다 개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방적 디지털 파트너십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파트너십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모든 디지털 파트너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합적인 글로벌 디지털 규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디지털 규제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표준의 설립,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ODA 협력 모델을 신규로 구축한다.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이를 공급망 구축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개발지식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인 KSP에는 「디지털 인텐시브 KSP」 모델을 구축한다.
- 이에 더해 산업부가 발표한 K-통상전략의 주요 과제들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논의를 통해 통상뉴딜에 반영한다.

2. 산업정책 보완

- 1) (총론) 우리의 산업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제조업 르네상스로 그 시스템이 이미 고도화 되어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관리하되,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산업 생산성을 고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기술정책의 고도화, ②휴먼뉴딜 보완, ③리쇼어링 정책 강화, ④민관협력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기술정책의 고도화) 신통상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2020)은 모방 및 학습 위주의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창의와 선도에 기반한 탈추격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발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다각화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① 우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의 내실있는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연구원(2020)은 2022년 발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산학연 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체계적 국제 협력 추진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공립 및 공공연구소의 투자, 인력, 평가 등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과 부처 공동의 차세대 대형 연구 프로젝트의 설계, 실효성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체제 마련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또한 기술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다각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산업연구원(2021)은 국내 연구개발에 있어서 ‘기술다각화’ 수준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연구개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중 하나로 기술다각화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국내 연구개발은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업이 기술다각화에 보다 큰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③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전략도 필요하다. 산업연구원(2021)은 또다른 보고서에서 지역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R&D 역량 →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활성화 → 신산업기반”으로 연결되는 지역성장 선순환구조 구축하여 R&D와 창업활동, 신산업 기반구축의 부문 간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리지(Start-up Village)” 확충을 통해 기업·전문인력 간 교류 장소를 제공하고, 자금과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리빙랩(Living Lab)”과 “메이커스페이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리쇼어링 정책 강화)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선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산업에 대한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유턴 대상 기업 선정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및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는 산업연구원(2021.2 월)이 제시한 대응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 ① 현재 유턴법은 각 기업의 업종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안을 책정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백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산업에 한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 양도, 축소 규정을 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보조금과 세제, 인력 지원의 경우에도 첨단업종과 공급망 안정화 업종, 백신 관련 업종 등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유턴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② 유턴법 지원을 통한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기업이 해당국의 경영활동을 중지하거나 축소’ 해야지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EU의 경우 유턴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의 축소 등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산업별 파트너십 구축) 미국과 영국이 각 산업별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는 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핵심산업별 민관학 합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 추진했던 전략을 고도화시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2.0(Industry Alliance 2.0)」을 구성하여 그 추진 기반을 공고히한다. 산업별로 기업이 꼭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 공공분야가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학계-정부간 기술 공유 및 규제 등 지원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실제 제품화와 연관된 협력을 유도한다. 예를들어 자동차 배터리에 관련된 국가 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연구원들이 한 팀이 되어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3. 휴먼뉴딜 보완

1) (고등교육) 우선 현재 휴먼뉴딜에 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추가한다. 고등교육 지원의 핵심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4 단계 두뇌한국 21(BK21)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연구경쟁력 강화 및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대학원 교육 내실화 및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현재 BK21 사업의 QS 대학평가 목표는 2027년까지 100 위권 대학을 7개(+2개)로 늘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세계 30 위권 대학을 2 개, 50 위권 대학을 5 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최우수 10 개 대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재교육) 재교육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각 기업이 직원의 재교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은퇴 후에도 인력자원이 사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은퇴 시점이 3년 내로 가까워진 직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4. 금융뉴딜 추가

1) (총론)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한국판 뉴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지지기반으로서 ‘금융뉴딜’이 필수적이다. 우선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데이터 기술발전을

기반으로한 펀테크를 산업 금융에 적극 활용하고, 전통적 금융과 공공 금융의 역할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모험금융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산업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 (녹색금융전략 시행)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수익성을 기반으로 투자하고 회수하는 녹색금융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민관 협동 녹색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범부처 「녹색금융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그린뉴딜을 적극 뒷받침한다. 영국 뿐 아니라 호주, 미국도 녹색금융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녹색금융 투자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중이다. 특히 영국은 2019년에 ‘2050 탄소제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실천전략으로 ‘녹색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대대적으로 발표 하였다.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선투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전담기관 중심으로 친환경 분야 다양한 민관 합동 펀드 설립한다. 녹색금융의

기반이 되는 법적근거, 통계, 기술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녹색금융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체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 정부의 예산, 세제 전 시스템에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3) (핀테크 확산) AI와 대안정보를 활용한 재무분석을 기반으로 혁신금융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비자금융에 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혁신산업 대출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각종 규제에 구속되어 있다. 상업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총 대출한도도 한정되어 있다.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금융 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규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대출 심사시 대안정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과 금융혁신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되, AI 기술과 접목한 금융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적인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핀테크 기술의 활용을 독려하고, 모험자본 공급 유인을 강화한다.

4) (공공산업 펀드 총괄 관리) 현재 공공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펀드는 각 펀드의 특성별로 그 관리주체가 상이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관리하는 공공참여펀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산업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금융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산업펀드의 집행 상황을 체크하고, 각 펀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신규 펀드 설립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펀드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해외 주요 펀드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펀드정책을 생산한다.

<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 주요내용 >

1. (금융녹색화) 기후와 환경 요소를 금융시스템 전반에 안착

- ① (인식의 확산)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스템 전반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각 부처 합동 성명문 발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연구지원 등
- ② (책임의 배분) 정부는 금융시스템 관련 규제기관과 주요 금융 공기업의 운영 규범에 녹색금융 요소를 배분
- ③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의 강화) 기후변화 관련 금융 정보공개TF와 함께 기업들의 기후변화 금융 관련 정보공개 촉진
- ④ (지속적 프레임워크 구축) 주변국의 액션플랜과 연계하여 영국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 기준을 정립하고 시장과 협업. 영국 표준 기관(BSI)은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 영국의 ODA 사업에 기후변화 요인을 도입하는 등 파리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모색

2. (녹색자금조달) 녹색 사업에 자금이 조달되도록 지원

- ① (장기적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기후환경법 2008’을 기반으로 장기적 실천 기반을 확보. 제1회 환경법안, 2019년 총리 성명문, EPC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책 인프라 구축
- ② (녹색금융 접근성 개선) 녹색금융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하는 공공펀드 유치를 통해 녹색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도. 녹색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자연자본 출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규제 개선 등 추진
- ③ (시장장벽 해소 및 역량강화) 민간자본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소하고 관련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 영국정부-유럽투자은행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 투자 SOC 프로젝트를 녹색화하기 위한 연구 추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의 성공적 녹색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3. (기회 포착) 영국을 세계 녹색금융의 허브화

- ① (녹색금융공사 설립) 영국 정부와 런던시가 각 2백만 파운드씩 출자하여 녹색금융 전담 기관을 설립(2019.7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술개발을 전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산을 위한 업무 수행
 - * 2021년 9월, 영국정부는 녹색금융공사가 설계한 녹색채권을 10조원 규모 발행
- ② (녹색금융 혁신)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민간, 정부, 산업, 학계 등과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지원, 녹색금융 관련 다양한 통계 생산 및 분석 등
 - 녹색금융공사 주관으로 녹색금융교육현장을 발행하고, 관련 회원사가 운영하는 녹색금융 교육 프로그램 인증

※ 영국의 녹색금융전략 인포그래픽(영국 재무부, 2019)



VI. 결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도마위에 오른지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제 4차산업 혁명이라는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각기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증폭시킨 불안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국, EU 등은 녹색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관련 규제와 결합하며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질서를 선도하는 주요 선진국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이후 제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연구원 등은 새로운 통상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새로운 산업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정부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개관하는 한편, 그간 우리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미래대응 산업전략은 큰 틀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주요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문조직을 정부내에 설치하고, 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금융 전략 및 탄소국경조정 등의 규제정책을 병행한다. 산업정책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여 민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극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교육 확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지난 몇십년간 고수해온 순수 자본주의, 개방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분야가 보다 산업구조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그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그 시기와 내용에서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 잘 편승하는 한편, 최근에는 오히려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18년에는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미중 무역분쟁 초기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선진국의 산업전략에 뒤처지지 않는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통해 통상지형 변형에

대응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경쟁력의 근본적인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통상뉴딜과 금융뉴딜을 추가하고, 리쇼어링 정책을 추가적으로 개편하며, 인재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 시스템 신설, 산업전략 종합관리 등을 통해 정책 추진기반 재편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첫째, 통상뉴딜에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반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산업안보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화 →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의 단계별 시스템을 가동한다. 디지털 경제권 형성을 위해 개방적 디지털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표준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둘째, 산업정책 고도화를 위해 2022년 발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혁신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한다. 휴먼뉴딜 보안을 위해 4단계 BK21 사업을 신속히 재편하여 세계 30위권 대학 2개, 50위권 대학 5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유턴법을 개정하여 대상기업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기업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아니라 업종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학 협력체인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2.0(Industry Alliance 2.0)」을 구성하여 산업별로 기업이 꼭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 공공분야가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학계-정부간 기술 공유 및 규제 등 지원방안 논의 등을 통해 실제 제품화와 연관된 협력을 유도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 전략에 금융뉴딜을 추가하고, 핀테크와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혁신자본이 대폭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고, 향후 그 영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즉시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적절히 유지하는 한편,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국내 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1.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특별보고서. www.nars.go.kr

국회예산정책처. 손동희. 2021.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사업평가. www.nabo.go.kr

기획재정부. 2019. 수출활력 제고 대책. www.moef.go.kr

기획재정부.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www.moef.go.kr

기획재정부. 2021. 한국판 뉴딜 2.0. www.moe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서진교, 김지현. 2019.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6), 1-20.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정명화.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KIEP Research Paper, 연구보고서, 20-20.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문희, 배찬권, 이규엽, 강준구, 김지현. . 2020.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EP] 정책연구브리핑. 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권평오. 2021. 코로나 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Global Market Report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2020. 연대와 협력의 케이-통상 본격 추진.
보도자료. www.motie.go.kr

산업연구원(KIET). 2019.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KIET). 박유미. 2019.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의미와
교훈.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KIET). 김인철, 조재한, 박종준 등. 2020. 넥스트
노멀(Next Normal)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KIET). 민혁기 등. 2021. 리쇼어링 추진전략과 과제.
Issue paper

산업연구원(KIET). 최민철. 2021. 국내 연구개발 효율성 하락
요인 분석. 연구자료 2021-08.

산업연구원(KIET). 사공목. 2021.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대응전략. 산업경제분석.

손열, 송병권, 이승주. 2016.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연세대학교국제학연구소. 2-5.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2017).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34(1).

한국개발연구원. Song, Y. (2020).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Mount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Trade Order and Korea's Policy Response). KDI FOCUS, (9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0.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0.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KITA). 2021.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통상리포트

한국은행(BOK).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BOK). 최문정, 김명현. 2020.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BOK). 202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7호.

한국은행(BOK). 2021.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해외 문헌

OECD. 2017. The future of global value chain. OECD

publishing. 8-9.

Great Britain.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2017).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Great Britain. HM Government. (2019). Green Finance Strategy: Transforming Finance for a Greener Future.

Great Britain. HM Government. (2019). UK Government Green Financing Framework

IMF. 2019.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 World Economic Outlook.

Mckinsey Global Institute(MGI). 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Fajgelbaum, Goldberg, Kennedy, and Khandelwal. 2019. The return to protectionism. NBER Working paper. 27-28.

Appendix

1. 일본 “수준 높은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수준 높은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 디지털 뉴딜
 - 차세대 행정서비스: 마이넘버 제도, 행정수속의 근본적 온라인화 등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플라이체인 디지털화, Beyond 5G, 디지털 격차대책
 - 새로운 근로방식·생활방식: 텔레워크 정착, 워킹맘 부담 경감 등
 - 제도·관행 개선: 서면·날인·대면주의에서 탈피

- 지방도시 혁신²⁷⁾
 - 도쿄 일극집중형에서 다핵연대형 국가로 전환: 스마트시티 실증 등
 - 지방 활성화: 식량안보, 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서플라이체인 효율화, FDI 유치, 해외 스타트업과 일본 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등

- 이노베이션
 - 과제설정·해결능력·창조능력이 있는 인재 육성: 교육개혁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펀드창설, 감염증 대책·방재 등의 연구중점화

- 포용적 사회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보장: 데이터헬스, 온라인진료 등 의료체제 강화
 - 소득향상·격차확대 예방: 정규직 고용 30만명 확대, 최저임금 인상
 - 사회적 연대와 지지기반 양성: 민간 기부 등 사회적 파이낸스 활용

- 국제협력
 - 자유·공정한 국제경제체제: RCEP 연내서명, 디지털경제 국제규칙 제정
 - 국제연대 강화: 치료약·백신후보 임상연구
 - 서플라이체인의 다원화: 기술유출방지, 국제금융허브로서 국제금융도시 확립
 - SDGs 등 지구규모 과제에 공헌: 이산화탄소 감소 「Beyond Zero」 지향

자료 : 일본 내각 국무회의(2020.7.),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8.) “코로나 공
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p36)

2. OECD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표지(OECD, 2021)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3. 영국의 산업전략 개관(영국 산업부, 2017)

Our five foundations align to our vision for a transformed economy



We will set Grand Challenges to put the United Kingdom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AI & Data Economy

We will put the UK at the forefro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revolution



Clean Growth

We will maximise the advantages for UK industry from the global shift to clean growth



Future of Mobility

We will become a world leader in the way people, goods and services move



Ageing Society

We will harness the power of innovation to help meet the needs of an ageing society